Ⅱ. 보험발전 간담회 토론 화두

1. 저성장·저금리 장기화

■ 유럽 재정위기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가계부채 문제와 주택시장 침체, 여기에 인구구조 고령화를 고려할 때 저성장·저금리가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.

- 국내경제는 유럽 재정위기로 세계경제 회복이 지연되어 수출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가계부채 문제, 주택시장 침체 등으로 소비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 장기간 경제성장률 회복이 어려워 보임.
  - 세계경제 회복에 걸림돌인 유럽의 경우 재정위기에 대한 대응수단이 기본적으로 재정지출 축소밖에 없기 때문에 재정위기 해결에 최소 5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함.
  - 국내경제 성장률이 세계경제성장률을 하회하고 OECD 성장률에 수렴해가고 있으며, 인구구조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중진국 함정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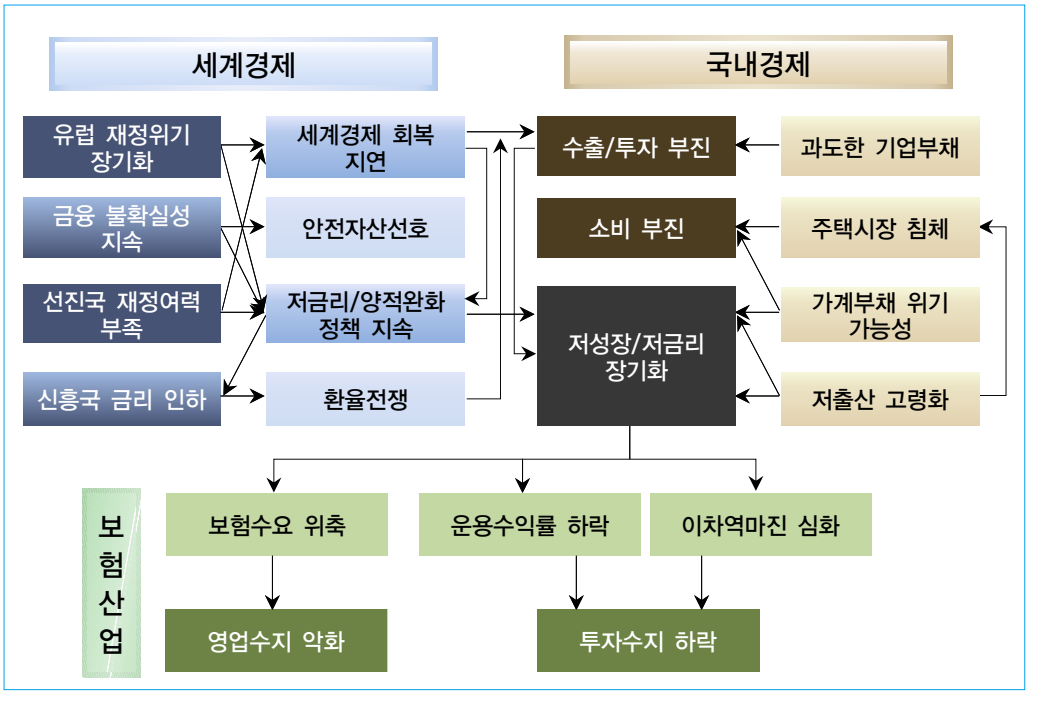
- 재정여력 부족으로 미국,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저금리 정책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, 이는 신흥국의 금리 인하를 유도하여 국내금리 상승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.
  - 연준의 양적완화정책과 ECB의 신용완화정책으로 풀린 유동성의 대부분이 중앙은행으로 다시 환류되거나 신흥국으로 유입되는 등 아

직까지 실물경제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

- 우리나라의 경우 저성장 장기화, 가계부채, 주택시장 침체, 양적완화정책에 따른 원화 강세 등을 고려할 때 통화당국이 정책금리를 인상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

● 이에 따라 국내경제의 저성장·저금리 장기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.

그림 Ⅱ-1 저성장·저금리 장기화와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



■ 저성장·저금리 장기화는 보험수요를 위축시켜 비차익에 의존하는 영업수지를 악화시키는 한편, 이차역마진 확대, 운용수익률 하락 등으로 투자수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험산업 생존의 위협이 될 수도 있음.

■ 또한 조만간 실시될 부채적정성 평가, 그리고 아직은 시기가 확정은 되지 않았으나 IFRS Phase Ⅱ가 도입될 경우 지급여력비율이 크게 하락하는 등 저금리 장기화 충격이 가중될 수 있음.

- 현 제도상 자산은 시가로 평가되는 반면, 부채는 장부가격으로 평가되고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100% 자기자본으로 인정되고 있어 금리 하락 시 가용자본이 과다 계산되기 때문

■ 실제로 1980~90년대 저금리 장기화로 미국과 일본에서 다수의 보험회사가 파산한 사례가 있음.

- 일본은 1980년대 후반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저금리가 장기화되고 1997년부터 2001년까지 7개 생명보험회사가 파산
- 미국은 1980년대 후반부터 저금리가 장기화되자 이차역마진으로 1991년 81개 보험회사가 파산
- 일본과 미국 모두 양적성장을 위해 고금리 저축상품 판매를 늘렸는데, 금리가 하락하고 이차역마진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자 고위험·고수익 상품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였고, 이로부터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여 파산에 이르게 됨.
  - 이 당시 이처럼 무모한 경영이 가능했던 것은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전략과 리스크 감독제도가 부재했기 때문

■ 우리나라의 경우 생·손보 모두 저축성보험과 장기보험을 중심으로 성장하였고, 고금리의 금리확정형 상품과 최저보증이율이 3%가 넘는 상품의 비중이 매우 높아 추가적인 금리 하락과 저금리 장기화에 매우 취약한 상황

■ 저금리 장기화에 대해서는 변동금리상품 또는 변액상품 판매 확대(상품포트폴리오 조정)를 통해 기존 계약의 금리 부담을 희석시키고 비차익으로 수익성 하락을 보전하는 것 이외에는 뚜렷한 대응방안이 없어 보인다는 것이 문제임.

● 진익 외(2010)[1)]

- 금리위험 관리 방안에는 상품포트폴리오 조정, 헤지수단 활용, 자산포트폴리오 조정 등이 있음.
- 그런데 상품포트폴리오 조정과 헤지수단 활용은 시장 여건상 여의치 않으며, 자산·부채종합관리도 장기자산이 부족하여 실행이 쉽지 않음.
- 자산·부채종합관리를 가능한 효과적으로 실행하면서 알파·베타 분리전략 등 초과수익 기회를 발굴할 수 있는 자산운용전략 필요함.

● 김해식 외(2012)[2)]

- 금리위험에 대해서는 신계약 판매를 통해 준비금의 부담 금리를 낮추고, 상품구성의 변화를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함.
- 금리변동 시 보험회사 가치는 투자자산 가치 변동과 보험영업 준비금 가치 변동이 동시에 나타나므로 전사적 관점에서 저금리에 대응해야 함.

● Swiss Re(2012)[3)]

- 기존계약의 경우 금리 민감도가 적은 상품으로 계약 전환을 유도하는 한편, 자산관리 능력 향상, 금리 헤지, 사업비 절감 등의 노력이 필요
- 신계약의 경우 최저보증금리 하향 조정, 보험료 조정과 함께 실적배당형 상품 등 금리 민감도가 낮은 상품으로 상품구조를 변화시켜야 함.

---

1) 진익·김해식·유진아·김동겸(2011), 「보험회사의 금리위험 대응전략」, 조사보고서 2010-8, 보험연구원.

2) 김해식·김소연(2012), 「보험회사의 저금리 대응, 전사적으로 대응해야」, KIRI Weekly 제195호, 보험연구원.

3) Swiss Re(2012), "Facing the Interest Rate Challenge", Sigma No.4/2012.

■ 저성장·저금리 장기화에 대해 예상 시나리오하에서 자산·부채위험을 전사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.

2. 소비자보호 강화 및 신뢰 회복

■ 금융상품 복잡화로 소비자 피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데, 보험산업의 지속성장과 사회적 위상 제고를 위해 소비자보호 강화와 소비자신뢰 회복이 무엇보다도 중요

- 2010년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보험상품 설명의무 강화, 적합성 원칙 도입 등 소비자보호 관련 규제가 강화되었음.
  - 또한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었으며, 소비자를 위한 판매수수료 제도 변화도 이루어짐.
- 특히 201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이 입법 예고됨.
  - 금융소비자보호법의 특징은 금융상품 및 판매행위에 대해 기능별 규제체계를 도입함으로써 동일기능·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것임.
- 이외에도 정책·감독당국은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판매채널 이슈에 대해 정책적 관심을 가지고 있음.
  - 감독당국의 경우 설명의무 및 적합성 원칙 등 현행 제도의 현실적 적용 방법과 함께 소비자보호를 위한 모범규준을 새로이 마련하고 있음.
  - 최근 판매채널 다변화에 따른 이슈로 방카슈랑스 채널 평가, 독립법인대리점(GA) 채널의 판매 및 자문기능 특화, 상품 또는 서비스 판매와 연계된 단종보험대리점 등이 있음.

- 2012년 상반기 변액연금 수익률 논란 등에 따라 변액연금의 상품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새로운 정보공시 방안이 제시됨.
  - 이에 생보협회는 기존 변액보험 펀드 위주의 정보 제공에서 벗어나 변액연금 및 변액유니버셜 상품에 대해 사업비 수준, 펀드투입 비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, 이를 금리연동형 저축성보험에까지 확대함.
  - 납입 보험료 대비 사업비 비율, 위험보장비용, 펀드투입 비율, 적립금 대비 최저보증비용 등도 공시항목에 추가

■ 전 세계적인 소비자보호 강화 추세에 맞춰 보험산업도 경영전략 차원에서 소비자보호에 대한 인식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.

■ 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공시제도에 일부 개선이 있었으나, 현행 공시체계상 비표준화되고 복잡한 보험상품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장기적인 공시정책과 보험산업의 노력이 요구됨.

- 정책당국은 소비자들이 공시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장기적 시각에서 공시제도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음.
- 또한, 보험회사도 상품 개발단계에서부터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품을 단순화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공시정보를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.

■ 소비자 신뢰는 기업 및 산업의 지속 성장 가능성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, 소비자 신뢰는 보험회사의 소비자보호 노력과 함께 사회적 책임 이행을 통해 제고될 수 있음.

■ 보험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, 경제민주화 등 대통령 선거, 친서민정책 등 사회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함.

3. 보험산업의 역할 변화 및 비전 제시

■ 최근 보험산업이 저축성보험 중심의 금융투자형 상품 위주로 성장함에 따라 타 금융업권과의 차별성이 약화되고 있으며, 더 이상 보험의 특수성을 주장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음.

■ 이에 따라 보험산업은 타 금융업권과 경합이 심화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, 새로운 보험상품 및 서비스 개발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가 요구됨.

- 보험산업이 제공하는 상품·서비스 내용을 다양화하고 사회적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사적안전망 기능 확대, 해외진출을 통한 시장 다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.

■ 궁극적으로는 금융소비자, 여론 주도층, 정책당국, 보험업계가 공감하는 장기발전 비전을 마련할 필요

■ 한편, 우리나라는 출산율 하락에 따라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급속한 인구구조 고령화에 직면해 있는데, 장기금융산업인 보험산업이 이를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기에 가장 적합

■ 고령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노후대비 저축과 연기금이 증대하여 보험 및 자산시장의 변화가 예상됨.

- 재정수입은 감소하는 반면 연금수급자 증가, 노인의료·복지비 상승으로 재정지출 증대, 재정적자 및 국가부채의 증가, 국민의 조세 및 사회보험료 부담 가중
- 공적연금 중심으로 편성된 은퇴 후 소득보장체제가 여러 형태의 연금이 적절하게 역할 분담하는 체제로 전환될 것임.

■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한계를 퇴직연금 중심의 사적연금으로 보완하려는 노력이 지속

- 퇴직연금제도는 2005년 12월 도입된 이후 2012년 8월 기준으로 적립금이 55조 원에 달하며 전년동기대비 46.6% 급증
- 도입 사업장 수는 아직 절반에 불과하고 기존 퇴직연금 가입기업도 지속적으로 적립금을 납입하는 구조이므로 퇴직연금시장은 향후에도 높은 성장률 유지 예상
- 대기업의 경우 퇴직연금 가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에 대한 영업에 퇴직연금 전문모집인을 적극 육성·활용할 필요

■ 의료비 규모의 증가로 인한 민영건강보험 수요확대와 장기요양서비스 수요 급증 예상

- 국민건강보험의 지속적인 보장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장률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으며 인구고령화는 국민건강보험의 재정부담을 가속화시킬 것임.

- 국민건강보험의 기능 한계와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증대는 지속될 것이며 이는 민영건강보험의 수요 확대로 귀결될 것임.
- 민영건강보험의 가입률은 높고 고령화로 인한 손해율 악화가 예상되나 성장성 측면에서는 여전히 높게 평가됨.

■ 실손의료보험의 단독상품 출시로 인한 부정적인 요인을 최소화하고 단독상품 출시를 기회로 활용하려는 노력과, 건강보험과 관련된 새로운 서비스 개발이 필요함.